주간통일정세 2011-34(2011.08.15~08.2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34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김정일, 메드베데프 러대통령에 축전(8/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이날 축전에서 "조선 해방 66주년에 즈음해 당신과 당신을 통해 러시아 인민에게 인사를 보낸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관계가 두나라 인민들의 공동 이익과 염원에 맞게 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당신의 사업에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北 "8·15는 김일성조선·민족 기원 열린 날"(8/15, 노동신문)

- 북한은 광복 66주년을 맞은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이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 덕이라고 주장하며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주민들의 충성을 유도하는 데 주력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위대한 김일성조선을 후손만대에 빛내여나가자'라는 사설을 통해 김 주석의 항일운동과 주체사상을 언급하며 "오늘은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찾아주신 조국해방의 날, 사회주의조선의 새 기원이 열린 날"이라며 "우리 조국이야말로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이라고 밝힘.
- 또 "백두의 혁명전통을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피줄기로 생명선으로 끝없이 이어나가야 한다" 등을 언급,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에 대한 충성을 간접적으로 강조

北김정일 "평북道 자본주의 날라리판"..통제강화(8/16,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父子)가 주민 탈북과 외부사조 유입에 따른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해 통제강화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은 이에 따라 탈북과 외부사조 유입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하는 북중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탈북 방지용 CCTV(폐쇄회로 TV)를 설치하고 철조망을 보강하는 한편 단속의 고삐를 죄는 것으로 알려짐.
- 16일 북한 소식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신의주를 시찰한 자리에서 현지 주민의 옷차림과 무질서 등에 대해 "평안북도가 자본주의의 날라리판이 됐다"며 검열을 지시

- 실제 북한 공안기관과 중앙당은 '남한풍' 등 외부 사조 유입을 김정은 후계구도의 위해요소로 지목했으며, 외부사조 확산이 북중 국경지역이나 해외 파견 근로자(공관원, 상사원 등)에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했다는 전언
- 해외 주재 북한 상사원은 "7월 초 대규모 중앙검열단이 평북지역에 파견돼 간부들의 사상문제와 주민의 사회주의 일탈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함.
- 중앙당과 공안기관은 특별팀을 구성해 주민의 휴대전화, TV, 라디오 사용과 숙박실태 등에 대한 검열에 들어갔으며, 국경경비대나 공안요원들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검열을 시행하고, '내부 간첩 색출'을 내걸고 특별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짐.

北,을지연습 비난…"핵억제력 질량적 강화"(8/17, 연합뉴스)

- 북한은 17일 외무성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잇달아 발표해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비난하면서 자위적 핵억제력의 강화 당위성을 밝힘.
-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남조선당국과 야합해 벌리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변함없는 적대적 본성을 여실히 드러낸 북침핵전쟁연습"이라며 "이에 대처해 우리가 자위적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담화는 또 "특히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우리의 핵무기를 탐색해 파괴하는 사명을 지닌 '특별행동부대'라는 것을 참가시킨 것은 매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라며 "조성된 사태는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강도적 방법으로 우리의 핵억제력을 빼앗아낼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北, 김정일 방러 확인…과거 방문 일화 소개(8/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 시베리아 및 원동지역을 비공식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데프 각하의 초청에 의해 러시아의 시베리아 및 원동(극동)지역을 비공식 방문하시게 된다"고 밝힘.
- 그러나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러시아 방문 일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한편 중앙통신은 과거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과정에서 있었던 일

화를 담은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러시아 방문 나날에 남기신 일화'를 19일부터 연재하기 시작

김정일 러 도착…"23일께 정상회담"(8/20, 연합뉴스; 프리마미디어)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일 2002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크렘린궁은 짤막한 성명을 내 김 위원장이 이날 러시아에 도착했으며 김 위원장이 극동지역과 시베리아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김 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주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발표
- 러시아 현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연해주 지역에 이어 극동 지역 최대 수력 발전소인 '부레이 발전소'가 있는 아무르주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 위원장이 부레이 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러 양측 간의 에너지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 극동 지역 통신사인 프리마미디어는 그러나 이날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나 다른 도시에 들르지 않고 곧장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예정된 울란우데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

北, 김정일 수행 명단 공개…김정은 없어(8/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수행단 명단을 공개
- 김 위원장의 방러 수행단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양건 · 박도춘 · 태종수 당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 오수용 함북도당 책임비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김영재 주러 대사, 심국룡 나홋카 총영사 등임.

김 위원장 방러 이틀째 극동 발전소 방문(8/21,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이틀째인 21일 극동 도시 하바롭스크를 지나 아무르주(州)의 부레이 수력발전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현지시간) 극동 도시 하바롭스크에서 약 600km 정도 떨어진 아무르주의 부레이 수력 발전소를 찾음.
- 극동 지역 최대 수력 발전소인 부레이 발전소는 러시아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을 경유해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과 함께 같은 노선을 통과하는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를 남북한에 제안하면서 전력 공급원으로 꼽은 곳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을 북한을 경유해 남한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임.

■ 기타 (대내 정치)

- 김영남, 8.17 離任 노르웨이 駐北 대사('디드리크 튄쎄트')와 담화 (8/17, 중통 · 중방)

나. 경제

국제사회 대북지원 급증…7월말까지 작년 2배(8/16, 미국의소리(VOA))

-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이뤄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가 작년 전체 지원액의 배 가량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유엔인도지원사무국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은 4천550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대북지원액(2천480만 달러)의 183%에 달함.
- 특히 올해 식량 지원은 작년(1천170만 달러)보다 2천100만 달러 늘어났는데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어린이 영양 지원, 낙농제품 지원 등이 이뤄졌다고 방송은 전함.
- 국가별로는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1천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EU)이 1천400만 달러, 스웨덴 740만 달러, 스위스 400만 달러, 노르웨이 250만 달러 등이었으며, 미국은 지난해 민간단체를 통해 6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아직 지원하지 않음.

中단둥, 올해 北무역탄 수입량 9배 증가(8/16,중국국문시보(國門時報))

- 올해 중국 단둥(丹東)을 통해 수입된 북한산 무연탄이 지난해보다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6일 중국국문시보(國門時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둥강(東港)항구를 통해 수입된 북한산 무연탄이 81만6천700t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천77만 달러(118억 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물량은 9배, 금액은 10배가 증가한 것이라고 신문은 밝힘.
- 국제 석탄 가격이 급등한 데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심한 가뭄으로 수력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화력발전소 의존도가 높아져 북한산 무연탄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北 외화벌이 무역회사 · 기관 200여개"(8/17, 연합뉴스)

- 북한이 대외적으로 밝힌 외화벌이 무역회사나 기관이 총 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발행하는 'Foreign Trade'라는 잡지를 분석한 결과, 외화벌이에 나서는 북한 무역회사나 기관이 총 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대북제재에 따라 대외무역 등에서 회사나 기관의 이름을 수시로 바꾸는 것으로 전해

지고 있으며, 또 상당수는 북한의 내각이나 군 등에 소속된 회사일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정부 당국은 북한의 외화벌이 주체를 크게 내각, 군부, 합영투자위원회, 대풍국제그룹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러 무역회사나 기관이 대체로 이들 네 그룹에 속해 외화벌이에 나서는 것으로 추정

민화협, 개성서 4차분 밀가루 200t 北에 전달(8/17,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7일 오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주민을 돕기 위한 밀가루 200t(약 1억 원 상당)을 개성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
- 민화협은 사리원시에 그동안 밀가루 1천t을 지원했고 9월 말까지 1천500t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

中, 北에 의료진 파견..의약품도 지원(8/17,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에 의료진을 파견, 무상 진료에 나서는 한편 100만 위안(1억 6천만 원)어치의 의약품도 지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1일 평양 중앙약품관리소에서 중국 위생부가 북한 보건성에 지원하는 의약품 기증식을 했다고 밝힘.
- 중국은 의약품 지원과 함께 지린(吉林)성 위생청 허우밍산(候明山) 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15명의 의료진을 파견, 북한 주민에 대한 무상 진료도 제공
- 이에 관화빙 대표는 "의료 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조선(북한) 주민의 건강과 양국의 우의 증진에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北 대북지원 분배현장 모니터링 사실상 수용(8/18, 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하면서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분배현장 모니터링' 요구를 북한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18일 통일부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지난 3~6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를 방문, 밀가루 분배현장을 모니터링한 뒤 관련 동영상 등을 통일부에 제출
- 이번 모니터링은 통일부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지원물품에 대한 분배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정부에 제출하기는 처음임.
- 정부는 특히 우리 측이 지정한 장소를 포함한 여러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수혜대상과 인원등 분배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출토록 민간단체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이달 3~6일 관계자 6명이 방북해 현장 모니터링을 한 민화협 측은 "(까다로운 수준의 모니터링이었는데) 북한도 협조적으로 나왔다"고 전했으며, 정부도 북한이 까다로운 모니터링을 허용한 데 대해 상당한 융통성

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

"北, 올해부터 무연휘발유 판매"(8/18,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올해부터 인체에 해가 적은 무연휘발유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청정연료와 무공해차량 파트너십(PCFV)' 소식지를 인용해 18일 전함.
- 이 소식지에 따르면 PCFV는 최근 북한을 유연휘발유와 무연휘발유가 함께 판매되는 이중체제 국가로 분류했으며, 또 PCFV는 북한측 초청으로 올해 1월24~26일 평양에 들어가 북한 당국자 35명을 대상으로 유연휘발유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교육함.

"北, 에너지수입국 다양화…中의존 탈피 모색"(8/18, 미국의소리(VOA))

-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딕 낸토 박사는 최근 발표한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증가하는 의존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 외에 인도와 이집트 등에서 정유 수입을 늘렸다고 밝힘.
- 북한은 지난해 인도로부터 3억3천만 달러 어치의 정유를 수입했고 북한 내 이동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로부터 2억6천500만 달러의 정유를 수입했으며, 실제 북한이 지난해 두 국가에서 수입한 원유는 5억9천500만 달러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4억7천900만 달러보다 많음.
- 낸토 박사는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에너지 수입원의 다양화를 모색하게 된 것은 정치적 이유"이라며 "과거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했을 때 그럴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설명
-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4억7천900만 달러어치의 정유를 수입했지만 3억9천700만 달러가량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했고 2억5천만 달러의 식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대신 조개류 등 7천900만 달러어치의 수산품과 과일류 등을 중국에 수출했다고 보고서는 밝힘.

北 환경보호법 개정…재생에너지 개발 의지(8/18, 연합뉴스)

- 북한이 에너지 자원의 개발 · 이용, 환경인증제도의 실시 등의 내용을 환경보호법에 추가했다고 18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총 4장 50조로 된 '환경보호법'의 제3장에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 이용, 환경인증제도 실시, 재(再)자원화 기술 도입과 관련해 각각 제38조, 제39조, 제40조를 추가했으며, 또한 제4장에는 '환경경제지표의 계획화'내용이 담긴 제44조, '환경실태장악'과 관련된 제48조를 추가
- 중앙통신은 법 개정 소식과 함께 "각 기관과 기업소, 단체들이 이런 법규에 기초해 환경보호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석탄, 원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 ·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은 올해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맞춰야 하는 선진국들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수력발전소와 평양방직공장 등 8곳에 대해 청정개발체제(CDM)등록을 신청했으며, 이중 예성강 3·4·5호 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 4곳에 대한 자격심사(Validation), 나머지 5곳은 사전고려대상(Prior Consideration)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美, 北수해복구 90만弗 긴급 지원(8/19,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8일 최근 수해를 입은 북한에 90만 달러(한화 약 9억6천700만원) 상당의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 국제개발처(USAID)가 복수의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최고 90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북한 강원도와 황해도 지역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 그러면서 "이번 긴급 지원은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적 모니터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긴급 지원을 지지한다"고 설명
- 국무부는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관련) 정치, 안보적 우려는 구분한다는 게 미국의 오랜 입장"이라고 강조
- 미국의 대북지원 발표는 지난 달 말 뉴욕에서 1년7개월 만에 북·미 고위급 대화가 열려 그간 중단된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을 협의한데 이어 나온 것이며, 한국 정부도 이달 초 수해가 발생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생필품 및 의약품 등 50억 원 상당의 물품 지원을 제안한 바 있어 이번 수해 지원이 남북, 북미 간 대화 재개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북러, 나진-하산 철도 12.8㎞ 현대화 완료"(8/21, 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사업의 첫 단계로 추진 중인 나진-하산의 철도 현대화(개보수)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한국교통연구원은 러시아 경제개발부 발표와 언론보도 등의 러시아 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중순까지 나진-하산 간 52km 철로 가운데 12.8㎞ 구간의 개보수가 마무리됐고 현재 두만강역, 웅상역 등 8개 철도역에서 개보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힘.
-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철도당국은 현재 나진-하산의 화물열차 운행 인력을 운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올해 안에 현대화된 철로에서 화물열차 운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최고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나진-하산의 철로 개보수를 비롯한 TSR-TKR 연결사업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는 전함.

北 "라선 투자 외국인 법적 보호" 강조(8/21, 연합뉴스)

- 21일 중국 연길(延吉)에서 열린 '두만강 학술 포럼'에서 북한 대표로 참석

한 김철웅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는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외국투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라선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북한의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008년에는 외국인 투자가나 라선지대에만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법'과 '합영법', '라선지대법'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장치가 추가로 마련됐다고 설명
- 또한 그는 북한은 헌법과 개정된 법률을 통해 외국 투자가들의 자본 몰수나 국유화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몰수 또는 국유화하게 되면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
- 라선에 투자한 외국인의 원금과 이윤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합법적인 거래에 의해 북한 내에서 취득한 재산의 자유로운 해외 송출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는 점도 강조
- 이에 북한이 중국에서 열린 학술 포럼에서 라선지대 외국 투자가 보호 법률을 상세하게 소개한 것은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北 수산성 양어관리국, '평양시 두단종어사업소 개건확장공사' 등 "양어업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에 총력" 보도(8/16, 중통)
- 平南 증산군·평원군과 남포시 등 서해안지대에 "성능이 개선된 풍력발전기 도입"과 신의주화장품공장의 "7가지 천연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자랑(8/17, 중통·중방)

다. 사회·문화

北 "아리랑 누적 관람객 1천만 명 넘어"(8/15, 평양방송)

- 2002년 시작된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의 누적 관객수가 1천만 명을 넘었다고 평양방송이 15일 전함.
- 평양방송은 이날 "첫 공연 이후 근 10년 동안 300여 차례 공연이 개최됐고 외국인 10만여 명을 포함해 1천만여명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힘.
- 이어 아리랑 국가준비위원회 소속 유춘일은 이 방송에 "2012년까지 '아리랑'을 보다 새로운 예술적 화폭으로, 강성대국의 국보로 창작·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함.

北젊은층에 '소녀시대' 춤바람(8/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한국 노래와 춤이 유행하면서 한국의 유명 걸그룹 '소녀시대'의 춤을 가르치는 강사까지 등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함.

- 북한을 수시로 오가는 한 중국인 무역상은 이 방송에 "얼마 전 한 부유층 여성으로부터 한국 댄스그룹 '소녀시대'의 CD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평양 중구역이나 대동강구역에 사는 10대,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디스코를 출 줄 모르면 아이들 축에 끼지 못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북한의 '춤바람' 분위기를 전함.
- 이 무역상은 최근 북한 부유층은 자녀들에게 손풍금(아코디언)이나 기타와 같은 악기보다는 춤과 노래를 가르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전함.

"北테마공원 개선청년공원에 암표 등장("8/19,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4월부터 북한 주민에게 개방된 평양 개선청년공원이 암표상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평양 모란봉구역에 있는 개선청년공원은 남한의 롯데월드, 용인 에버랜드와 비슷한 놀이공원으로 수십m 높이의 자이로드롭(급강하탑), 배모양의 바이킹(배그네) 등을 갖추고 있음.
- 한 북한 주민은 RFA와 인터뷰에서 단체 입장객의 경우 1인 입장료가 300원으로 최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함.
- 그러나 점차 개별적으로 공원을 찾는 주민이 많아지고 데이트 하는 젊은이들이 몰리면서 공원 앞에 암표상이 등장했고 1장에 3천원까지 하는 암표를 팔고 있다고 전함.

2. 대외정세

가. 일반

北, 10년 도피 中 밀수업자 검거 송환(8/15, 법제일보)

- 북한에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온 중국인 밀수업자가 북한 당국에 검거돼 중국에 인도되었다고 중국 법제일보(法制日報) 인터넷판이 전함.
- 15일 법제일보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변경부대가 지난 11일 지명 수배 중인 중국인 류(劉, 53)모 씨를 북한으로부터 인계받음.
- 단둥 변경부대는 이달 초 류씨가 10년 전인 2001년 북한으로 잠입했다는 첩보를 입수, 북한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북한 당국은 최근 류씨를 체포, 중국에 인도했으며, 랴오닝 공안당국이 북·중 공안기관 공조를 통해 중국인 범죄 용의자를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제일보는 전함.
- 북한이 류씨를 중국에 인도한 것은 양국이 맺은 '변경지역과 국가 및 사회안전질서 보호를 위한 상호 합작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중국은 이 규정에 따라 중국 내 탈북자들이 검거되면 북한으로 이송하고 있음.

러대통령, 北에 '3국 가스 · 철도 협조' 당부(8/15,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광복 66주년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을 통해 "우리는 가스화와 에네르기, 철도건설 분야에서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사이의 3자 계획을 비롯해 호상 관심사로 되는 모든 방향에서 조선과의 협조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근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수출을 위한 프로젝트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프로젝트 등을 3국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협조의사를 밝힌 내용이 공개되기는 처음으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적극적인 사업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가스공급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지역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이용해 남북한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최대 석유 · 가스 생산업체인 가즈프롬, 북한의 원유공업성 등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업은 북한이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한국으로 공급되는 가스의 경유지 역할로 거액의 수수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를 푸는 대안 중 한가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美한인단체 "이산가족상봉 대비 실태조사 예정"(8/16, 미국의소리(VOA))

-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모임인 '미국 한인 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가 미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6일 전함.
- 이 위원회의 이철우 이사는 북미 간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수와 나이, 성별, 북한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 이 이사는 최근 미 연방하원 찰스 랭글(민주.뉴욕)의원의 보좌관을 만나 미 연방정부의 북한인권법 관련자금을 이산가족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 이철우 이사는 "북미 간 이산가족상봉 추진에 양국 정부 이외에 미국 적십자사도 관여하고 있다"며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에 협조하려는 의도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함.

美 "을지연습은 방어적연습..北자제해야"(8/19, 연합뉴스)

- 미국은 18일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해마다 반복해 온 방어적 훈련이라면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을지연습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 "을지연습은 사전에 계획된 연습"이라면서 "결코 도발적인 것이 아니고, 이례적인 것도 아니며, 투명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고 밝힘.
-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들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북-미, 미군유해발굴 재개 회담 합의(8/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미국 측은 해당경로를 통해 미군유골발굴을 위한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기하는 공식편지를 우리 측에 보내왔다"며 "우리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미국이 제기한 미군유골발굴회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이어 "현재 조미(북미) 쌍방 군부들 사이에 회담과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미국은 1996년부터 10년 간 북한에서 33차례의 미군 유해발굴 작업을 통해 220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지만 2005년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인력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굴 작업을 중단한 상황임.

■ 기타 (대외 일반)

- 인도네시아 독립 66돌 관련 "지리적 위치, 풍부한 자원 등 정치·경제·문화" 등 상세한 소개와 '연대성' 표시(8/17, 중통·노동신문·중방)
- 駐北 인도네시아 대사('나스리 구스타만'), 8.17 自國 독립 66돌 즈음 박의춘·박길연(외무상·외무성 부상)·박근광(黨 부부장)·전영진(대외문화연락委 부위원장) 등 초청下 연회 개최(8/17, 중통·평방)

나. 6자회담(북핵)

김성환 "대북입장 이전보다 달라진 것 사실"(8/17, 연합뉴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북한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이전보다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접촉이 시작됐는데 북한에 선(先)사과를 요구한 정부의 입장에 확실한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의에 "100% 그렇다(변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답변
- 그는 "6자회담과 천안함이 100% 연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북한 비핵화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그런 관점에서 (6자회담이) 진행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북한이 얼마나 선(先)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
- 그는 다만 '6자회담이 연평도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냐'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건 아니다"고 일축
- 김 장관은 남북비핵화 회담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했느냐는 질의에 "북한도 '비핵화회담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선 "전망하기 쉽지 않다. 낙관하지는 못한다"고 답변

3. 대남정세

李대통령 임기후반 국정기조 '공생 발전'(8/15,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철학의 '키워드'는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었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한편 대북 메시지는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를 요구하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매우 짧게 언급
-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과 북핵 문제 등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교착상태에서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기 어려웠던 고민이 묻어있는 대목이라고 뉴스는 전함.
- 이에 김두우 수석은 "나온 것들을 진전시키는 것도 원만하지 않은데 지금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함.

통일부 "추석계기 이산상봉 제의계획 없다"(8/17,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북측에 먼저 제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 같은 언급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이날 오전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얼마 남지 않은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도록 남북 간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임.
- 이 당국자는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 우리가 먼저 북측에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설명
- 통일부는 그러나 북측이 먼저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해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로 남북관계 경색으로 우리가 먼저 상봉 제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산가족 문제는 최우선 인도주의적 문제인 만큼 북측이 성의를 보이면 피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

●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김성환 "대북 입장 이전보다 달라진 것 사실"(8/17)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북한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이전보다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음.
-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발 빠른 접촉이 시작됐는데 북한에 선(先) 사과를 요구한 정부의 입장에 확실한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의에 "100% 그렇다(변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음.
- 그는 이어 북일대화에 대해 "일북 간에 대화가 있었던 걸로 알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대화라기 보다는 대화를 하기 위한 물밑접촉의 일부였다. 공식대화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음.

〈김정일 방러, 6자회담 재개 앞당기나〉(8/19)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일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됨에 따라 이번 방문이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고, 회담 의제로 6자회담 재개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다뤄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임.
- 북핵 외교가는 러시아가 6자회담 재개 문제에서 한국과 비슷한 입장을 북한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음. 러시아가 그간 우리 정부와 다소 비슷한 입장을 보여 왔다는 이유에서임.
- 앞서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지난 3월 평양을 방문, 핵실험 중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의 영변 핵시설 복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관련시설에 대한 사찰 등을 요구했음.
- 러시아의 이런 요구는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로 UEP를 포함한 핵활동 중단 등을 밝힌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동소이한 내용임. 한국과 러시아는 이달 초 외무장관 회담을 하고 "북핵 6자회담이 더 실질적이고도 생산적으로 열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도 양국 간 입장이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임.
-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도 6자회담에 나름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우리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은 아니었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가 김

위원장에게 우리와 비슷한 메시지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음.

- 외교가의 이런 판단에는 한반도 안정이 러시아와의 이해관계에도 맞는다는 인식이 깔렸다. 러시아가 공을 들이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을 성사시키려면 한반도 정세 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왔던 중국도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정상회담 수준에서 우리 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보일 경우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외교가 일각에 있음.
- 다만 러시아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 더 가까운 태도를 취할 경우 오히려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흐름이 정체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일부 있음.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한국과 미국을 견제할 경우 양 진영 간 6자회담 재개 조건 등을 놓고 일종의 기 싸움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임.

〈김정일 방러〉 북·러 밀착..6자재개 '양날의 칼'(8/20)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일 러시아 방문길에 오르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출렁이고 있음. 이번 방러는 9년 만에 이뤄지는 북러 정상교류라는 양자외교 차원을 넘어 '북러 밀착'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해냄으로써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돌출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미중 구도로 전개돼온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도 러시아 변수의 개입으로 새로운 환경과 구도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음.
- 김 위원장의 러시아 행(行)은 현 한반도 정세에서 다목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됨. 일단 북러 양국관계의 '정상화'라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는 200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한 이후 9년만의 일임. 접경국가임에도 10년 가깝게 정상 간 대화가 부재하면서 양국관계는 정치경제적으로 '소원'했다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 시각임.
- 북한의 대(對) 중국 정치경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양국이 추진하는 각종 협력과 교류사업은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했고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운용 과정에서 '주변부'를 맴도는 처지에 놓였었음.
- 양국의 이 같은 정상화는 동북아 정세대응과 경제적 실익확보 측면에서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교묘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임.
- 당장 북한으로서는 내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 공고화와 경제지원 확보가 초미의 과제임. 중국 외에는 '우군'을 찾기 힘든 북한으로서는 주변 국가, 특히 접경국인 러시아와의 관계정상화가 필수적 현안일 수밖에 없음.
- 이는 한반도 정세운용 과정에서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긴요함. 러시아와의 관계정상화는 대중 편향구도를 수정·견제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북한에 보다 유리한 협상환경을 조성하고 외교적

으로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수단임.

- 러시아로서는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는 발판을 확보하는 정치안보적 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음. 그동안 남북미중 중심으로 진행돼온 6자회담 재개 교섭과정에서 은근히 소외당했던 러시아로서는 이번 북러 정상회동을 계기로 제한적이나마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과 입김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추후 경제협력에 따른 잠재가치도 적지 않음. 러시아는 '숙원사업'인 극동지역 개발과 함께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둘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전략적 이해가 복잡하게 맞물린 북러 간 밀착흐름은 동북아 외교지형과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에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어보임.
- 무엇보다도 한반도 문제 논의를 둘러싼 외교구도에 새판짜기가 예상됨. 북한이 과도한 '대중국 쏠림현상'을 견제하면서 북중, 북러 관계의 균형점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시각임.
- 앞으로 북러 간 밀착도에 따라서는 한반도 정세현안 대응과정에서 중국이 패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최대 관전포인트는 러시아 변수의 등장으로 미중을 중심으로 전개돼온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임. 외교가에서는 러시아의 적극적 개입이 6자회담 재개 흐름에 있어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대두되고 있음.
- 러시아는 그동안 한미일 대 북중의 외교적 대치구도 속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해왔음. 북중과 보조를 맞춰 '조건 없는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주장하면서도 한미일의 입장을 두둔하며 북한을 향해 '비핵화 사전조치'를 촉구하는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음. 일종의 '등거리' 외교를 꾀해온 셈임.
- 이에 따라 이번 북러 정상외교를 계기로 러시아가 어느 쪽으로 튈지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제기됨. 우선 러시아가 모종의 역할을 꾀할 경우 6자회담 재개 흐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긍정론이 나옴. 러시아가 대북 식량 · 경제지원을 고리로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임. 러시아는 한미일의 요구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의 영변 핵시설 복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관련시설에 대한 사찰을 촉구할 것이란 관측임.
- 북한이 이를 수용하는 자세를 취할 경우 6자회담 재개 흐름은 상당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흐름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옴. 러시아가 한미일의 입장을 반영하기 보다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건 없는 6자회담 조기 재개' 쪽으로 방향을 돌릴 소지가 적지 않다는 분석임.
- 러시아로서는 극동지역 개발과 양국 간 경협사업이 워낙 큰 숙원사업인

터라 북한이 강도 높은 버티기에 나설 경우 태도를 바꿀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임. 특히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함께 러시아를 '또 다른 우군'으로 만들어 6자회담 재개의 조건과 형식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됨.

- 한 외교소식통은 "러시아의 관심이 큰 남북미 가스관 연결 사업을 '볼모'로 북한이 역으로 설득에 나설 경우 러시아가 설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음.
-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선행조치'를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한미일과 '조건 없는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주장하는 북중러 간 신 냉전구도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6자회담 재개 흐름을 또다시 난항을 빠뜨리는 부정적인 시나리오임.
- 이런 맥락 속에서 뉴욕 북미대화 이후 상황을 탐색해온 남북미중으로서는 러시아의 개입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남북-북미대화 '2라운드'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음.
- 북러가 이번 정상회동을 계기로 어느 정도의 밀착도를 보여주느냐가 하반기 한반도 정세의 기상도에 영향을 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됐음.

나. 미 · 북 관계

◎ 한인단체 "이산가족상봉 대비 실태조사 예정"(8/16)

-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모임인 '미국 한인 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가 미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6일 전했음. 이 위원회의 이철우 이사는 북미 간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수와 나이, 성별, 북한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앞서 이 위원회는 지난 5월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평양방문 중 북측과 협의한 시범 서신교환을 위해 이에 참여할 미국 측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또 이 이사는 최근 미 연방하원 찰스 랭글(민주.뉴욕)의원의 보좌관을 만나 미 연방정부의 북한인권법 관련자금을 이산가족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음.
- 이철우 이사는 "북미 간 이산가족상봉 추진에 양국 정부 이외에 미국 적십자사도 관여하고 있다"며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에 협조하려는 의도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음.

◎ 北,을지연습 비난…"핵억제력 질량적 강화"(8/17)

- 북한은 17일 외무성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잇달아 발표해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비난하면서 자위적 핵억제력의 강화 당위성을 밝혔음.
-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남조선당국과 야합해 벌리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변함없는 적대적 본성을 여실히 드러낸 북침핵전쟁연습"이라며 "이에 대처해

우리가 자위적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음.

- 북한이 언급한 핵억제력의 '질량적 강화'는 핵무기 기술력을 높이고 숫자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어 주목됨. 담화는 또 "특히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우리의 핵무기를 탐색해 파괴하는 사명을 지닌 '특별행동부대'라는 것을 참가시킨 것은 매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라며 "조성된 사태는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강도적 방법으로 우리의 핵억제력을 빼앗아낼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음.
- 담화는 그러나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비핵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음. 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담화에서 "이번 전쟁연습강행으로 미국과 괴뢰 패당이 뒤집어썼던 평화와 대화의 가면이 모두 벗겨졌다"며 "(UFG는) 우리에 대한 전면전쟁선포"라고 주장했음.
- 이어 "이번 전쟁연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 길로 나갈 결심을 더욱 굳게 해주고 있다"며 "미국과 괴뢰 패당은 더는 우리를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음.
- 지난 16일 시작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한미 연합의 지휘소 훈련으로, 26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됨.

美 "을지연습은 방어적 연습..北자제해야"(8/19)

- 미국은 18일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해마다 반복해 온 방어적 훈련이라면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음.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을지연습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 "을지연습은 사전에 계획된 연습"이라면서 "결코 도발적인 것이 아니고, 이례적인 것도 아니며, 투명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고 밝혔음.
- 그는 "우리는 이 훈련을 매년 해오고 있고, 북한은 매년 항의하고 있다"면서 "이 훈련은 상호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한미)연합군의 준비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들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앞서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을지연습을 비난하면서 자위적 핵억제력의 강화 당위성을 주장했음.

美, 北수해복구 90만弗 긴급 지원(8/19)

- 미국 정부는 18일 최근 수해를 입은 북한에 90만 달러(한화 약 9억6천700만원) 상당의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음.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 국제개발처(USAID)가 복수의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최고 90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북한 강원도와 황해도 지역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음.

- 그러면서 "이번 긴급 지원은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적 모니터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긴급 지원을 지지한다"고 설명했음. 국무부는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관련) 정치, 안보적 우려는 구분한다는 게 미국의 오랜 입장"이라고 강조했음.
- 미국의 대북지원 발표는 지난 달 말 뉴욕에서 1년7개월 만에 북·미 고위급 대화가 열려 그간 중단된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을 협의한데 이어 나온 것임. 아울러 한국 정부도 이달 초 수해가 발생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생필품 및 의약품 등 50억 원 상당의 물품 지원을 제안한 바 있어 이번 수해 지원이 남북, 북미 간 대화 재개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이어졌던 지난해 9월에도 미 정부가 긴급 지원에 나선 바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음. 실제로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도 "지난해 9월 수해 당시 USAID가 북한에 60만 달러 상당의 긴급 구호품을 공급한 바 있다"고 밝혔음.
- 앞서 국무부는 이달 초 대변인 명의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북한의 수해 발생과 관련한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우려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혀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美 국가별 테러평가보고서 北 아예 제외(8/19)

- 미국은 북한을 3년째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평가를 유지하면서 올해는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항목을 처음으로 아예 뺀 것으로 나타났음.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 직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해제됐으나 이후에도 연례 테러보고서에서는 일본 적군파 잔류 등의 내용을 담은 평가가 포함됐었음.
- 18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0 테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항목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중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이 소개됐으나 북한과 한국은 제외됐음.
-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내용은 뉴질랜드의 테러 방지 국제협력 노력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3월말 뉴질랜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북한이 불참했다는 내용이 기술된 게 유일했음. 아울러 테러지원국으로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4개국이 지정돼 북한은 3년 연속으로 지정 제외됐음.
-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도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와 관련, 천안함 도발은 상대방 국가 군대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주장을 들어 국제적 테러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미 국무부가 지난 2004년부터 발간해온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항목이 제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뉴욕에서 열린 북미회담 이후

대화 재개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앞서 지난해 발간된 '2009 테러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고 평가했었음. 그러나 북한이 무기수출법에 따른 대(對)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거듭 지정됐음을 전했었음.
- 아울러 1970년 항공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4명이 계속 북한에 살고 있다면서 이들의 일본 송환을 위한 북일 간 협상 경과 등을 전한 뒤 "북한이 아직 송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또 '2008 테러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2007년 이전에는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소개돼 왔음.

북-미, 미군유해발굴 재개 회담 합의(8/19)

-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북미 당국 간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미국 측은 해당경로를 통해 미군유골발굴을 위한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기하는 공식편지를 우리 측에 보내왔다"며 "우리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미국이 제기한 미군유골발굴회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음.
- 중앙통신은 이어 "현재 조미(북미) 쌍방 군부들 사이에 회담과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음. 앞서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담당국의 캐리 파커 공보관은 지난 2일 유해발굴 사업 재개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서한을 북한 당국에 보냈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힌 바 있음.
- 미국은 1996년부터 10년 간 북한에서 33차례의 미군 유해발굴 작업을 통해 220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지만 2005년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인력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굴 작업을 중단했음.

다. 중·북 관계

北, 10년 도피 中 밀수업자 검거 송환(8/15)

- 북한에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온 중국인 밀수업자가 북한 당국에 검거돼 중국에 인도됐음. 15일 중국 법제일보(法制日報) 인터넷판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변경부대가 지난 11일 지명 수배 중인 중국인 류(劉, 53)모 씨를 북한으로부터 인계받았음.
- 류씨는 2000년 8월 담배 밀수 혐의로 단둥 해관(세관)에 체포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해 단둥 공안당국에 의해 지명 수배를 받아왔음. 단둥 변경부대는 이달 초 류씨가 10년 전인 2001년 북한으로 잠입했다는 첩보를 입수, 북한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북한 당국은 최근 류씨를 체포, 중국에 인도했음.
- 랴오닝 공안당국이 북·중 공안기관 공조를 통해 중국인 범죄 용의자를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제일보는 전했음. 북한이 류씨를 중국에 인도한 것은 양국이 맺은 '변경지역과 국가 및 사회 안전질서 보호를 위한 상호 합작회의' 규정에 따른 것임. 중국은 이 규정에 따라 중국 내 탈북자들이 검거되면 북한으로 이송하고 있음.

中단둥, 올해 北무역탄 수입량 9배 증가(8/16)

- 올해 중국 단둥(丹東)을 통해 수입된 북한산 무연탄이 지난해보다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16일 중국국문시보(國門時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둥강(東港)항구를 통해 수입된 북한산 무연탄이 81만6천700t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천77만 달러(118억 원) 규모임.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물량은 9배, 금액은 10배가 증가한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음.
- 국제 석탄 가격이 급등한 데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심한 가뭄으로 수력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화력발전소 의존도가 높아져 북한산 무연탄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음.
-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한국 정부의 대북 교역 중단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지하자원의 대중 수출을 크게 늘렸음. 미국의 소리(VOA)는 지난달 중국 해관통계자료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북·중간 교역액이 25억8천만 달러(4천331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고 보도했음.
-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와 마주한 단둥은 북·중 교역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최대의 대북 교역 거점이며, 북한산 수입품 가운데 무연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中, 北에 의료진 파견..의약품도 지원(8/17)

- 중국이 북한에 의료진을 파견, 무상 진료에 나서는 한편 100만 위안(1억6천만 원)어치의 의약품도 지원했음.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1일 평양 중앙약품관리소에서 중국 위생부가 북한 보건성에 지원하는 의약품 기증식을 했다고 밝혔음. 이번에 지원된 의약품은 100만 위안 상당이라고 주북 중국대사관은 설명했음.
- 기증식에는 중국 측에서 관화빙(關華兵) 북한 방문단 대표가, 북한에서는 김명철 보건성 부상이 각각 참석했음.
- 중국은 의약품 지원과 함께 지린(吉林)성 위생청 허우밍산(候明山) 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15명의 의료진을 파견, 북한 주민에 대한 무상 진료에도 나섰음. 내과와 안과, 치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중국 진료진은 9일 동안 함경남도에 머물면서 북한 주민들을 진료할 예정임.
- 관화빙 대표는 "의료 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조선(북한) 주민의 건강과 양국의 우의 증진에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김명철 부상은 "중국의 지원이 우리의 농촌 주민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음.

〈김정일 방러〉 中매체, 신중 보도(8/20)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20일 오전 국경을 넘어 러시아 하산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중국 매체들은 관련 소식을 신중히 전하는 분위기임. 관영 신화통신은 AP, AFP, 로이터 등 서방 통신사보다 다소 늦은 낮 12시12분(한국시각 오후 1시12분) 김 위원장의 방러 소식을 3줄 짜리 문장으로 짧게 전했음.
- 신화통신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러시아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제목의 블라디보스토크발 기사에서 러시아 현지 매체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날 하산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음. 통신은 또한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동부 시베리아 도시 울란우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음.
- 신화통신은 별도의 영문 기사에서 현재까지 북한 정부는 김 위원장의 방러에 대한 소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도 자사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계열사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인터넷판에서만 연합뉴스 등 외신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특별 열차가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사실 위주로 보도하는데 그쳤음.
- 이 밖의 중국의 주요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방러 동향에 관한 소식을 거의 전하지 않았음. QQ닷컴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코너에서도 이 소식은 주요 뉴스로 다뤄지지 않고 있음.
- 그간 중국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과거 수차례 자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 시점까지 보도를 자제하는 관행을 지켜왔음. 따라서 이런 보도 관행에 비춰봤을 때 중국 매체들은 북한 또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 확인 전까지는 지금처럼 논평 없이 외신을 인용하는 수준의 신중한 보도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라. 일 · 북 관계

〈김정일 방러〉 日, 北-러 경제협력에 주목(8/20)

- 일본 언론은 20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사실을 신속히 보도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음. 교도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두 나라 국경지대의 경제개발에 러시아를 끌어들여 협력관계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이 통신은 북한이 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는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 접근하는 것은 경제 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외자도입을 다양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전했음. 통신은 북한이 22일부터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인 나선에서 처음으로 국제 상품 전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김 국방위원장이 상품 전람회에 맞춰 스스로 러시아의 극동을 방문한 것은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려는 강한 의도라고 설명했음.
- 이와 함께 이달 4일은 김 국방위원장이 과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서명한 '모스크바 선언'의 10주년이었다면서 이 시기를 맞아 러시아를 찾은 것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외교가 중국 일변도라는 내외의 시각을 불식하려는 생각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음.

- NHK방송은 이번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음. 이 방송은 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과 한국에 수출하는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한 협의와 함께 양국 간 경제 관계의 강화를 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년 만에 이뤄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 지원과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 등이 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아사히신문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과 북한에 대한 에너지 및 식량지원이 논의될 것이며 6자회담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음.

마. 러 · 북 관계

○ 러대통령, 北에 '3국 가스 · 철도 협조' 당부(8/15)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가스, 에너지, 철도건설 분야에서 남북한과 러시아 3국간 협조를 직접 언급했음. 15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매체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광복 66주년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을 통해 "우리는 가스화와 에네르기, 철도건설 분야에서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사이의 3자 계획을 비롯해 호상 관심사로 되는 모든 방향에서 조선과의 협조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
- 이어 "이 계획들을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경제적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근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수출을 위한 프로젝트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프로젝트 등을 3국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협조의사를 밝힌 내용이 공개되기는 처음임.
-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적극적인 사업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됨. 가스공급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지역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이용해 남북한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최대 석유 · 가스 생산업체인 가즈프롬, 북한의 원유공업성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이 사업은 북한이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한국으로 공급되는 가스의 경유지 역할로 거액의 수수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를 푸는 대안 중 한가지로 거론되고 있음.
-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프로젝트는 남북한 철

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성사되면 한반도가 동북아의 물류기지가 될 수 있지만 아직 남·북·러 3자 간에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김정일 위원장도 이날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과 염원에 맞게 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당신의 사업에도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축전을 보냈음.

〈김정일 방중 석 달만에 방러 임박..왜 가나〉(8/19)

-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도를 높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이 주목됨. 김 위원장의 방러 임박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19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확인했음. 이번 방러는 큰 틀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한데다 중국을 사이에 두고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됨.
- 북측으로서는 핵 문제와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으로 미국은 물론 남측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임. 경제는 물론 안보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심화된 상황에서 중국으로의 쏠림을 우려할 수밖에 없음. 이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중국을 제어 또는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김 위원장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지 약 3개월 만에 러시아로 발길을 돌리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지나친 쏠림은 북한에 독배일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는 중국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음.
- 북한은 러시아 측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김정은으로의 후계세습에 대한 지지도 암묵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임. 러시아로서도 북한과의 거리를 좁혀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대함으로써 중국과 미국으로 향한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관측됨.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치열한 '삼각게임'이 벌어지는 셈임.
- 북러 간 경제협력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임. 이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북측에 가스, 에너지, 철도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음. 그는 최근 김 위원장에게 보낸 광복절 축전에서 "가스화와 에네르기(에너지), 철도건설 분야에서 러시아, 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사이의 3자 계획을 비롯해 호상 관심사로 되는 모든 방향에서 조선과의 협력을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방러에서 경제부문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임. 북한으로서는 값싼 가스를 활용하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며, 동북아의 물류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음. 북측은 또 벌목공이나 건설노동자의 극동지역 진출 확대, 대(對) 러시아 채무 완화 등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관측됨.

– 북한은 남측과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막힌 상황에서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함. 특히 내년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김정은으로의 안정적 후계세습이 절박성을 더하고 있음. 러시아로서는 극동지역을 경제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셈임. 중국이 북측과 황금평 및 라선특구 공동개발에 나선 상황에서 러시아는 라진항에 대한 입지강화도 도모할 것으로 관측됨.

〈북-러 경제현안 논의에 주력 전망〉(8/19)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의 경제현안에 관심이 쏠림. 특히 북한이 내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정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에서는 양국이 추진하는 철도, 가스 등의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로 협의될 것이라는 게 중론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최근 광복 66주년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가스, 에너지, 철도건설 등의 분야에서 북한과 협조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음.

– 북러 정상회담이 열려 논의된 경제협력문제는 이달 말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장관급 협의를 통해 가시화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됨.

– ◇하산-나진 철도연결 = 남북한과 러시아 등 3국이 동북아 물류협력벨트로 검토해온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사업이 김 위원장의 방러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 개연성이 있음.

–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이 사업의 하나로 러시아의 국경도시 하산과 북한 나진을 잇는 50여 ㎞의 노후화된 철로를 개보수하는데 합의했음. 또 2008년 4월에는 하산-나진 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및 이용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음.

– 그러나 이후 이 프로젝트는 공사 대금을 대기로 한 러시아 투자회사가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사실상 중단됐음. 특히 러시아는 이미 북한으로부터 나진항의 제3호 부두를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하산-나진 구간의 철로를 활용하면 동해안을 통해 화물을 효과적으로 운송할 수 있음.

– ◇남-북-러 가스관 연결 = 러시아는 최근 북한을 거쳐 한국에 가스관을 연결하는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러시아 최대 석유·가스 생산업체인 가즈프롬 대표단은 지난 7월 초 방북해 북한 원유공업성과 원유, 가스 분야의 협력관계를 논의했음.

–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8일 러시아와 남북한간 가스관 부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음. 북한도 최근 3국을 잇는 가스관 프로젝트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음.

– 앞서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과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9월 매년 최소 100억㎥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프

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북핵 문제 등으로 후속협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음.

- ◇北채무 상환 = 북한과 러시아간 경제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해온 채무 상환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드러날 공산이 큼. 양국은 북한이 옛 소련에서 빌려 쓴 38억 루블 차관의 상환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동안 협의해왔지만 현재 시세로 환전하는데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 2007년 3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4차 '북-러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위원회'에서도 러시아는 채무액을 최고 88억 달러로 산정했지만 북한은 절반가량인 50억 달러 수준으로 보고 부채 전액을 탕감해 달라고 요구했음.
-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채무액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임. 러시아로서도 가스관 연결, 나진항 이용 등의 경제협력에서는 권리를 확대하는 대신 채무 문제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임.

러시아 지원 밀가루 北도착(8/19)

- 러시아가 지원한 밀가루를 실은 첫 배가 19일 흥남항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음. 중앙통신은 이날 "러시아 정부가 조선(북한)에 식량 5만t을 무상제공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19일 식량을 실은 첫 배가 흥남항에 도착했다"며 "앞으로 식량을 실은 배들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고 밝혔음.
- 통신은 또 러시아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미화 500만 달러를 기증해 북한에 식량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러시아 정부가 이번에 식량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의 표시"라고 강조했음.
- 러시아의 대북식량지원은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장관회담 때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음.
-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해 이르면 20일 오전 북한에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지원이 김 위원장의 방러 분위기 조성용일 가능성도 있음.

"김 위원장, 23일 울란우데서 메드메데프와 회동"(8/20)

- 20일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 확실시되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3일 바이칼 호수에서 멀지 않은 동부 시베리아 도시 울란우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크렘린 소식에 정통한 러시아 관계자가 20일(현지 시간) 밝혔음.
- 이 소식통은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소속 선발대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 울란우데로 가 있다고 전했음. 이 소식통은 러-북 정상 회담은 울란우데에 있는 동부군관구 소속 제11공수타격여단 영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하면서 동부군관구 사령

관이 최근 정상회담의 구체적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다녀왔다고 덧붙였음.

- 특별 열차로 이동할 김 위원장은 울란우데 기차역에서 정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음. 러시아 일간 신문 이즈베스티야도 19일 크렘린 소식통을 인용해 러-북 정상이 다음 주 울란우데에서 회동할 것이라고 전했음.
- 울란우데는 몽골족이 주로 사는 동부 시베리아 브랴티야 자치공화국의 수도로 인구는 약 40만 정도다. 바이칼 호수로부터 동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음. 기계 및 철강 산업 도시로 유명함.
- 현재로선 20일 특별열차를 이용해 러-북 국경을 넘은 김 위원장이 중간 기착지에 들르면서 이동을 계속해 23일 울란우데에 도착한 뒤 현지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할 것으로 보임.

"김정일 특별열차 러 하산 도착..환영 행사"(8/20)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20일 오전 러시아 하산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음. 하산은 북-러 국경에 인접한 러시아의 첫 기차역임. 한국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가 북러 국경을 넘어 오전 10시께 하산역에 도착했으며, 현지에서 환영행사가 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소식통도 하산 역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이날 오전 12시(연해주 현지시간)께 하산 역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음. 소식통은 연해주 주정부 관계자 등이 나와 김 위원장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이날 당초 예정보다 2~3시간 지연됐음. 애초 김 위원장은 이날 이른 아침 국경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었음.
- 러시아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을 경유해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과 함께 같은 노선을 통과하는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를 남북한에 제안하면서 전력 공급원으로 꼽은 곳이 바로 부레이 수력 발전소임. 이곳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을 북한을 경유해 남한으로 이어지는 송전선을 깔아 한반도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음.
- 김 위원장이 부레이 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러 양측 간의 에너지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 김 위원장은 이어 열차로 이동을 계속해 23일 바이칼 호수에서 멀지 않은 동부 시베리아 도시 울란우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총 방러 기간은 1주일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음.
- 김 위원장이 메드베데프 대통령 뿐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를 모두 만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러 정상회담 러시아 측 카운터파트에 대해 "메드베데프 대통령만 만난다고 단정적으로 볼 수 없다"면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를 모두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러 기간이 1주일 정도 되면 오다가다 푸틴 총리도 만날 수도 있다"고 전했음.

"북러, 나진-하산 철도 12.8㎞ 현대화 완료"(8/21)

- 북한과 러시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사업의 첫 단계로 추진 중인 나진-하산의 철도 현대화(개보수)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음.
- 한국교통연구원은 러시아 경제개발부 발표와 언론보도 등의 러시아 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중순까지 나진-하산 간 52km 철로 가운데 12.8㎞ 구간의 개보수가 마무리됐고 현재 두만강역, 웅상역 등 8개 철도역에서 개보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음.
- 개보수 작업은 철로를 교체하고 나무로 만든 침목(枕木)을 '콘크리트 침목'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나진-하산 구간의 가장 긴 터널인 나진 웅라터널(3천850m)의 개보수 작업도 시작됐다고 교통연구원은 전했음. 북한과 러시아는 조만간 이 구간의 웅상터널(499m)과 만포터널(301m) 보수공사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음.
-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철도당국은 현재 나진-하산의 화물열차 운행 인력을 운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올해 안에 현대화된 철로에서 화물열차 운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북러 양국은 2008년 4월 나진-하산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및 이용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러시아는 나진항으로 들어오는 동북아지역의 화물을 철도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구상 중임.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최고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나진-하산의 철로 개보수를 비롯한 TSR-TKR 연결사업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됨.
-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은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작업은 러시아가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수송로를 구축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러시아는 최근 북중 간 경제협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철도, 가스 등의 협력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음.
- 한편 북한과 러시아간 교역량은 2005년 2억3천320만 달러에서 2007년 1억5천980만 달러, 2009년 4천940만 달러 등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서 9천870만 달러를 기록했음. 작년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8천230만 달러이고 수입은 1천640만 달러였음.

北, 김정일 수행 명단 공개…김정은 없어(8/21)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수행단 명단을 공개했음.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명단에 없었음.
- 김 위원장의 방러 수행단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양건 · 박도춘 · 태종수 당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 오수용 함북도 당 책임비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김영재 주러 대사, 심국룡 나홋카 총영사

등임.

- 김정은은 지난 5월 김 위원장의 방중 때처럼 북한에 머물다가 김 위원장의 귀환 때 접경지역에서 영접할 것으로 보임.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는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각하의 초청에 의해 러시아 시베리아 및 원동지역을 비공식 방문하기 위해 가는 길에 20일 아침 러시아 국경역 하산을 통과했다"며 빅토르 이샤예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와 세르게이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시아 대사 등이 영접했다고 밝혔음.
- 북한이 과거 김 위원장의 방러를 앞두고 방문 사실을 미리 발표하기는 했지만 현지 일정을 다음 날 곧바로 공개하기는 매우 이례적임.
- 이 통신은 "김정일 동지는 잠시 후 러시아 간부들의 환송을 받으며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고 전했으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또 "장군님의 러시아에 대한 방문은 조러 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천만 군민의 투쟁을 힘 있게 추동하는 역사적인 계기로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김 위원장 방러 이틀째 극동 발전소 방문(8/21)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이틀째인 21일 극동 도시 하바롭스크를 지나 아무르주(州)의 부레이 수력발전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음. 전날 러-북 국경 도시 하산을 찾으며 러시아 방문을 시작한 데 뒤이은 빠른 행보임.
- ◇ 부레이 발전소 방문 =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현지시간) 극동 도시 하바롭스크에서 약 600km 정도 떨어진 아무르주의 부레이 수력 발전소를 찾았음. 현지 인터넷 뉴스통신 '포르트 아무르'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오전 9시 30분)께 아무르주 노보브레이스크 마을의 '부레야' 역에 도착했음. 부레이 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전권대표 빅토르 이샤예프와 아무르주 주지사 올렉 코제먀코가 그를 수행했음.
- 김 위원장이 열차에서 내려 붉은 카펫이 깔린 길을 따라 걸어 나오자 환영나온 러시아 여성들이 '소금과 빵'이 든 쟁반을 바쳤음. 러시아식 환대의 의미였음. 역사 주변에는 김 위원장을 보기 위해 주민들이 몰렸으며 수십 명의 보안요원들이 경호에 나섰음. 역사에서 가까운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창문에 커튼을 치도록 지시가 내려졌음.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철저히 금지됐음.
- 역사에서 약 5분 동안 환대를 받은 김 위원장은 특별열차로 북한에서 싣고 온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로 갈아타고 수행원들과 함께 부레야 역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부레이 발전소로 향했음.
- 극동 지역 최대 수력 발전소인 부레이 발전소는 러시아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을 경유해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과 함께 같은 노선을 통과하는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를 남북한에 제안하면서 전력 공급원으로 꼽은 곳임. 이곳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을 북한을 경유해 남한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음. 김 위원장의 발전소 방문도 이 프로젝트 실현과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음.

- 발전소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특별히 한국어로 번역된 홍보 영상물을 관람한 뒤 기계실과 댐 등을 둘러봤음. 그는 곧이어 방명록 서명을 부탁받고 이미 이곳을 다녀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서명을 살펴본 뒤 자신의 방문 소감을 기록하기도 했음.
- 부레이 발전소에서 점심을 먹은 김 위원장은 오후 4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는 바이칼 호수 인근의 동부 시베리아 도시 울란우데로 향했음. 아무르주에서 울란우데는 약 3천km 떨어져 있음. 북-러 정상은 23일 울란우데의 군부대 내에서 회담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부레야 기차역을 떠나기에 앞서 열린 환송행사에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 측으로부터 학이 그려진, 돌조각들로 만든 그림(石畵)을 선물 받았고, 이때 항상 쓰고 다니던 검은 안경을 벗어 눈길을 끌기도 했음. 당초 부레이 발전소에서 성사가 점쳐지던 김 위원장과 푸틴 총리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 하바롭스크 통과 = 하바롭스크 철도 관계자와 경찰에 따르면 20일 러-북 국경 도시 하산을 통해 러시아로 들어왔던 김 위원장은 21일 새벽 4시(한국시간 새벽 2시)께 극동 하바롭스크주(州)의 주도 하바롭스크 기차역에 도착했음.
- 김 위원장은 하산에서 연해주 주도 블라디보스토크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북상해 하바롭스크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음. 하산에서 하바롭스크까지는 약 900km 거리임. 당초 김 위원장은 하산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뒤 하바롭스크로 향할 것으로 예상됐었음.
- 역사에서 만난 현지 경찰 콘스탄틴은 "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새벽 4시께 역사에 들어와 약 30분 동안 머물다 다시 떠났다"며 "김 위원장이나 일행이 열차에서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음. 그는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어디로 갔는지는 보안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음.
- 현지 TV 방송에서도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중이라는 단신 뉴스가 자막으로 처리될 뿐 그의 방문 일정을 보여주는 어떤 영상도 나오지 않았음.
- 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는 모두 17량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첫째 객차에는 집무실, 둘째 객차에는 침실, 셋째 객차에는 통신실이 있고 다른 차량들에는 경호요원과 수행원들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하산 역에서 러시아 측 수행원을 태운 4개의 차량이 덧붙여지면서 모두 21개 객차로 늘어났음.

바. 기 타

○ 국제사회 대북지원 급증(8/16)

-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이뤄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가 작년 전

체 지원액의 배 가량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유엔인도지원사무국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은 4천550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대북지원액(2천480만 달러)의 183%에 달했음.

- 대북지원액을 분야별로 보면 식량 지원 3천270만 달러, 보건분야 600만 달러, 농업 분야 210만 달러, 지뢰 제거 160만 달러 등 순이었음. 특히 올해 식량 지원은 작년(1천170만 달러)보다 2천100만 달러 늘어났는데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어린이 영양 지원, 낙농제품 지원 등이 이뤄졌다고 방송은 전했음.
- 국가별로는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1천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EU)이 1천400만 달러, 스웨덴 740만 달러, 스위스 400만 달러, 노르웨이 250만 달러 등이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연합사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53만 명 참가"(8/16)

- 한미연합사령부는 16일 "한국과 미국, 7개 유엔참전국의 병력과 정부 인원 등 53만 명이 한반도와 태평양지역, 미국 본토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참가한다"고 밝혔음. 연합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습은 다른 연합사 연습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연례적으로 실시된 UFG 연습에는 그간 한국 측에서 군단급과 함대사급, 비행단급 이상 부대에서 5만6천여 명, 미 측에서는 증원병력 3천여 명을 포함해 3만 여명이 각각 참가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53만 명이라는 포괄적인 참가 규모가 나온 것은 처음임.
- 연합사 관계자는 "참가 인원은 대부분 한국과 미국 병력"이라면서 "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연습에 참가하는 부대 규모를 모두 참가 인원으로 계산하는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음. 그는 "영국과 프랑스, 호주, 캐나다, 태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 7개 유엔참전국에서는 전투병력이 아닌 소수의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한다"고 전했음.
-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습에 참가하는 부대는 한국과 미국 본토, 태평양 지역에서 모두 위성으로 연결해 훈련하기 때문에 참가 병력의 규모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음. 또 연합사는 "이 연습은 고급 군사지휘관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연습하고 양국 지휘관과 참모들에게 기획, 지휘통제 운영, 정보, 군수, 인사 절차를 훈련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음.
- 제임스 서먼 사령관은 "UFG 연습은 한국과 주변지역에 대한 모든 위협

에 대처하도록 준비 · 예방 ·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둔 도전적이고 실전적인 훈련"이라면서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배운 교훈은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동맹의 최근 (대응)경험과 지난 연습을 통해 축적된 것들을 적용해 보고 있다"고 말했음.

– 서먼 사령관은 "UFG 연습은 한미동맹의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양국군의 상호운용성과 유엔참전국 병력의 통합운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어적인 성격의 연습"이라고 덧붙였음.

고엽제대책위 "캠프캐럴 인근 주민 백혈병 확인"(8/17)

–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 인근 지역 주민 사이에서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건강 이상 사례가 확인됐다고 시민단체들이 주장했음. 시민단체들은 이런 질병이 캠프 캐럴의 오염과 관련이 있다며 왜관읍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영향 전수조사와 캠프 캐럴 안팎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요구하고 있음.

–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 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고엽제 대책위)는 17일 중구 정동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조사단은 지난 7월 13~15일 지역주민 58명(남성 25명, 여성 3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했음.

– 조사 결과 캠프 캐럴 헬기장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2명의 백혈병 환자가 발생해 사망했고, 41구역에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는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 환자가 각각 1명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고엽제 대책위는 "불과 수 십 가구 밖에 되지 않는 캠프 캐럴 최근접 마을에서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 등 4건의 조혈기계 악성질환이 발견된 것은 캠프 캐럴 위험요인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인과적 관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소견'들"이라고 주장했음.

– 대책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캠프 캐럴 주변 전 지역에 대해 광범위한 환경오염조사가 필요하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왜관읍 주민의 건강영향에 대한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대책위는 "기지 내 지하수에서 트리클로로에텐(TCE), 테트라클로로에텐(PCE) 등이 검출됐으나 한미합동조사단은 이것이 어디서 기인한 물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하는 한미공동조사단에 대해 한국 국민은 더 이상의 기대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음.

– 이들은 "환경부는 8월 초에 환경시료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주민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를 8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10여일이 지난 지금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 정부의 무능력함에도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음.

– 대책위는 "왜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 관련 역학 전수조사, 캠프 캐럴 기지와 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주민추천 전문가들이 반드시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국회 외통위, 24-25일 한미FTA 공청회 개최(8/18)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는 24-2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음.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24일부터 양일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그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8월 내 비준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야당이 당론이라는 이유로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단 비준안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박재완 "한미FTA 피해 지원규모 1조원 늘어"(8/19)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피해대책 지원규모에 대해 "총 21조1천억 원에서 22조1천억 원으로 1조원 늘어났다"고 말했음.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 한미FTA에 따른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음.
- 그는 특히 "지원규모에 반영되지 않은 세제지원 등 조세지출을 포함하면 사실상 지원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 하겠다"고 강조했음.
- 그는 "이번에 기존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대책에는 구조조정 제도개선 방안,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음.
- 박 장관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기존 대책에 비해 지원규모를 크게 늘리지는 못했지만, 농어민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간 수요가 적어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축소하는 등 우선순위를 조절해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음.

나. 한 · 중 관계

駐中 경제2공사에 정영록 교수 유력(8/15)

- 정부가 주중 한국대사관에 경제공사 2명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경제2공사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음. 정 교수는 학계 내 중국경제 전문가로 황병태 주중 대사 재직 시절에 대사의 경제고문을 지내면서 중국에서 인적 네트워크도 갖춰 주중 대사관의 경제2공사로서는 적임으로 지적되고 있음.
- 15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한 · 중 교역규모도 확대일로에 처하면서 우리 정부가 현재 1명인 주중 대사관의 경제공사를 2명으로 늘려 미래 환경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며, 중국 정부에도 이런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음.

– 정부는 일단 주중 대사관의 경제1공사는 중국 내 주요 부처를 상대로 한 업무에 주력하고, 경제2공사는 이외의 기업 · 금융 · 각종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원활한 한 · 중 경제협력 관계 형성에 주력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통상부 내 통상협력 분야의 국장급 인사를 주중 대사관의 경제1공사를 내정했으며, 정 교수를 경제2공사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정부는 그동안 경제2공사는 외교부 밖에서 찾는다는 원칙 아래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의 경제부처는 물론 학계를 대상으로 적임자 선정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음.
– 정부는 세계 150여 개 공관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에 경제공사 2명 체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음. 정부의 이런 결정은 근래 중국에서 금호타이어 사건을 필두로 우리나라 기업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화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임.
– 금호타이어는 지난 3월 15일 중국중앙(CC)TV로부터 품질 문제를 이유로 지적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 누리꾼까지 나서 비판하는 형국이 조성됐었음. 아울러 중국 내 다른 우리나라 기업에도 이와 비슷한 '압박'이 늘고 있다는 지적임.

제주에 중국 총영사관 설치 논의 본격화(8/19)

– 제주에 중국 총영사관을 설치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됨. 제주도는 중국 외교부 황핑(黃屛) 영사국장이 23일 제주를 방문, 우근민 지사와 주제주 중국 총영사관 설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음.
– 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조속히 제주에 총영사관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임. 한국과 중국 정부는 26일 외교통상부에서 한 · 중 영사업무 협상회의를 열어 주제주 중국 총영사관 설치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함. 황핑 영사국장도 이 자리에 참석함.
– 제주도는 한 · 중 협상 결과가 나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사관 설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7월 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 · 중 외교장관 회의에서 제주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겠다며 한국 정부에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독도레이서, 中 상하이서 '독도 콘서트'(8/21)

– 작지만 아름다운 섬 독도를 알리기 위한 한국의 대학생 단체인 '독도 레이서'가 21일 중국 상하이한국문화원 다목적홀에서 교민과 중국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콘서트'를 개최했음.
– 한국 대학생 6명으로 구성된 '독도 레이서'의 이날 행사는 1시간 가량에 걸쳐 풍물놀이와 탈춤, 가야금 연주, 독도 관련 퀴즈 맞추기 등으로 구성됐음.
– '독도레이서'는 이날 행사를 통해 지난 2월25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6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미, 유럽, 중앙아시아 등 전 세계 20여

개국을 돌며 독도를 홍보해온 6개월 대장정을 마무리했음.

- 이들은 앞서 스탠퍼드대, 토론토대, 맥길대, 존스홉킨스대, 산 마르코스대 등 세계 유명대학들과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부에노스 아이레스 등의 한국문화원, 리마, 부에노스아이레스, 파리 등의 한글학교 등에서 독도 콘서트를 열기도 했음.
- '독도 레이서'는 당초 이달 중순 일본 도쿄, 오사카, 시마네현 등에서 일본 국민과 만나 독도에 대한 교류를 가지려 했으나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상하이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열고 오는 2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 179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음.

다. 한 · 일 관계

〈李대통령 독도 언급 안 해..'성숙한 대응'에 초점〉(8/15)

- 이명박 대통령이 8 · 15 경축사에서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인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일본에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은 기존의 성숙한 대일외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됨.
- 여기에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영유권 문제를 재차 언급하는 것은 일본의 '국제분쟁 지역화' 전략에 말려들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임.
- 특히 일본 정부 차원의 중대한 도발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독도 · 동해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인식도 반영됐다는 것이 외교가의 시각임.
- 정부 당국자는 "이 대통령의 경축사는 현재까지 외교 기조를 잘 유지하면서 성숙한 대일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도발해왔을 때는 강하게 맞대응하겠지만 현재는 그럴 대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음.
- 다만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결코 잊지 않을 것",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각각 언급, 독도 · 동해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입장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했음.
- 이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독도 · 동해 문제를 영토 문제 이전에 역사(과거사)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일본에 환기시키면서 일본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분석됨.
- 정부 당국자가 11일 동해 문제를 "식민시대의 유산"이라고 말하고, 김성환 외교장관이 12일 브리핑에서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최초의 희생물"이란 내용이 담긴 변영태 전 외무장관의 외교공한을 소개한 것도 이런 맥락임.
- 이 대통령이 기존의 대일 외교기조를 다시 밝혔다고 해서 올 하반기 한

일 교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잇따른 일본의 독도 도발로 악화된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정부가 한일 간 고위급 인사교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임.

- 한 외교 소식통은 이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정상외교는 선택의 문제로 일본 방문에 대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특히 일본도 새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커 올해 정상외교 성사 가능성은 좀 더 봐야 한다"고 전망했음.

日재무상 "야스쿠니 A급 전범, 전범 아니다"(8/15)

-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이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A급 전범에 대해 '전쟁 범죄자가 아니다'는 망언을 되풀이했음. 지지통신에 따르면 노다 재무상은 15일 오전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A급 전범이 전쟁범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던 2005년의 입장과 관련 "사고방식에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밝혔음.
- 이는 2005년 자신이 민주당에 제출했던 '야스쿠니신사에 관한 질문주의서'에서 "(야스쿠니에 합사된) A급 전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쟁범죄자가 아니다"고 밝혔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의미임. 그는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옳은지 그른지와 관련 "총리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음. 또 총리가 될 경우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다"면서 언급을 피했음.
- 노다 재무상은 2005년 "A급 전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A급 전쟁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 범죄자가 합사됐다는 이유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것은 논리로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옹호했음.
- 그는 "잘못된 A급 전범 이해에 기초한 야스쿠니 참배 논란은 A급 전범으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이며, 인권과 국가의 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음. 노다 재무상은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이달 하순 예정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예정임.

청와대 "李대통령 언제든 독도 방문 가능"(8/15)

-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계획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를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음.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도를 방문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그는 "다만 방문 시기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언제 하느냐는 것은 여러 상황과 시기, 대통령 일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음.

〈민주 "日대사관, 孫대표 독도방문 저지 로비"〉(8/15)

- 주한 일본대사관측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독도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15일 알려졌음. 민주당 정장선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손 대표의 독도 방문이 기상 악화로 취소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음.
- 그는 "일본대사관측이 어제(14일) 우리 당의 한 전직 의원을 통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독도를 가지 않는다'며 '손 대표도 가지 않으면 안되겠느냐'고 전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는 예정대로 갈 것'이라고 답해줬다"고 밝혔음.
- 정 총장은 "이는 사실상 민주당에 의사를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손 대표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음. 손 대표의 독도 방문 저지 로비에 나선 인사에 대해 정 총장은 "주한 일본대사가 그랬을 리는 없고 공사 정도가 아닐까 한다"고 소개한 뒤 "웃기는 일이다. 일본대사관이 이번처럼 한 적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음.
-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은 "일본 대사관이 해서는 안 될 외교적 결례를 했다"며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내정간섭을 한 것"이라고 성토했음. 한편 손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신이 발표한 독도 성명서에 대해 "현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고, 침략전쟁의 잘못을 인정하고, 독도 영유권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철회하게 하는 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했음.
- 또 정부의 독도 문제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를 포기하고 당장 대립되고 군사적인 시위를 하는 외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대방이 집적거려도 못 본 척 하는게 아니고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음.

'강훈 피살사건 대책위', 일본에 재수사 촉구(8/16)

- 미국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15일 지난해 일본에서 숨진 재미동포 대학생 강훈(영어명 스캇 강) 군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대일 압박에 나섰음.
- 강군 피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광복절인 이날 낮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조기 종결한 일본 경찰의 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뒤 4천500여 명이 서명한 재수사 촉구 서한을 미야모리 조지 일본 총영사에게 전달했음.
-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은종국)도 별도로 미야모리 총영사에게 서한을 보내 조속한 재수사를 통한 피의자 기소를 강력히 요구했음. 한인회와 대책위는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재수사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음.
- 강군은 뉴욕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8월 한국 체류 중 잠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도쿄 신주쿠의 한 건물에서 머리가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돼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닷새 만에 숨졌음.

- 사건 현장의 CCTV 화면에서는 강군이 일본인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듯 배를 움켜쥔 채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시신 부검 결과도 계단에서 넘어져 숨졌다는 일본 경찰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나왔다고 대책위와 한인회 측은 밝혔음.
- 대책위 측은 이르면 강군 사망 1주기인 오는 30일 일본으로 건너가 경찰이 단순 사고사로 수사를 종결한 근거를 따지고 현장 CCTV 화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조지아주와 연방 의회에 청원서를 낼 예정임.
- 레이먼드 워즈니악(64) 대책위 사무총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일본에서 억울하게 죽어도 말 없이 묻히는 사건이 많은 걸 알게 됐다"며 "앞으로 진상규명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정의가 승리한다는 신념을 갖고 재수사 관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음.

〈광복절에 광주 찾은 일본 대학생 57명〉(8/16)

- 올해도 어김없이 광복절에 일본 대학생들이 광주를 찾았음. 전남대학교 국제협력본부가 15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여는 '국제여름학교'에 고쿠시칸(國士館), 오사카(大阪), 도호쿠(東北), 규슈(九州) 대학 등 일본 14개 대학에서 57명의 일본 학생들이 참가했음.
- 이 프로그램은 일본인 대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학 간 양방향 국제화를 꾀하려고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씩 진행되고 있음. 불편한 한일 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한류(韓流) 열풍을 반영하듯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대학생 수가 늘고 있음.
- 프로그램은 오전 한국어 수업, 오후 남도지역 문화 체험 활동으로 진행됨. 한국어 수업은 전남대 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사팀과 일어일문학과 객원 교수팀의 도움을 받아 자체 제작한 한국어 교재가 활용됨. 문화체험 활동은 음식 만들기, 전통 복장 체험, 풍물 난타 체험, 전통 시장 체험 등으로 꾸며짐.
- 오는 25~26일에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 및 근현대사 강의 청취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국립 5.18묘지 방문이 예정돼 있음.
- 고쿠시칸 대학의 세키네 유다이(21)씨는 "지난해 여름학교에 형이 참가했는데 너무 유익했다고 소개해 이번에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음.
-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남대 학생 23명이 프로그램 전 과정을 동행하며 홈스테이 등을 통해 일본 대학생들과 우정을 쌓게 됨.
- 이 대학 국제협력본부장인 신경구(영어영문학과) 교수는 16일 "한일 양국이 독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양국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국제 여름학교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크다"면서 "과거를 회피하지 않고 냉철하게 공부해야 하지만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기본으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음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음.

'한일협정 무효화' 국민행동 준비위 발족(8/16)

- '한일협정 무효화를 위한 국민행동 준비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1910년 한일합병 국치조약과 1965년 한일협정을 무효로 하기 위한 실천에 나선다고 밝혔음.
- 준비위는 성명에서 "박정희 정권이 대일 굴욕외교 끝에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과 여러 협정은 일본의 후안무치한 역사 왜곡을 묵인하고 방조한 결과"라며 "군부독재의 모욕적 유산인 한일협정을 무효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음. 준비위는 "1965년 한일협정 무효화를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 시민의 투표를 통해 반영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음.
- 이를 위해 한일협정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의 공식입장에 반영되도록 하며 일본에 대한 국민의 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등의 실천사항을 내세웠음.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 반환과 독도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도 다짐했음.
- 준비위 결성을 주도한 이부영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한일협정 체결 후) 46년이 지났어도 일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식민통치 시대로 되돌아간 느낌을 준다"며 "내년 선거에서 정권을 담당할 세력에게 한일협정 문제에 대한 의사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음.
- 준비위에 참여한 이재오 특임장관도 "일본과의 관계는 해원상생해야 한다"며 "지난 시절 가난했고 독재치하에 민주화가 급했지만 이제는 국력에 걸맞게 한일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음.
- 준비위에는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명진 스님, 임헌영 민족문제 연구소 소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신경림 시인, 유홍준 교수, 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각계 인사 109명이 참여했음.

"동해 표기 외교부 예산 5천만 원에 불과"(8/16)

- 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우리 영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파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 외교부의 동해 표기 관련 예산이 5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외교부 1년 예산 1조5천억 원 가운데 동해 표기 관련 예산은 총 5천80만원이었음.
- 항목별로는 수용비(사무실비용) 2천600만원, 여비 2천180만원(국제기구 방문 680만원 활용비 1천5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이었음. 작년 예산은 2천만 원이었으며 2012년은 동해의 국제표기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IHO 총회 등을 대비해 예산 1억 원을 요구한 상태임.
- 정 의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국립해양조사원이 동해 표기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실무 역할을 하지만 일본해 표기가 관행인 현실을 바꾸려면 실무라인 이상의 외교라인이 가동돼야 한다"면서 "외교부가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음.
- 이와 함께 "외교부가 동해 표기 문제의 컨트롤 타워를 자청했지만 관련 인원은 유엔과 2등 서기관 혼자"라면서 "이 서기관은 국제기구 분담금,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정무, 총회 업무 등도 지원하기 때문에 동해표기에 전념키 어렵다"고 덧붙였음.

- 외통위 소속 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동해 표기와 관련해 실제 예산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였고 예산도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무관심 외교'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음.
- 외교부 당국자는 "국내 학자 외에 명칭 관련된 연구를 하는 세계적인 학자에게 연구를 별도로 맡기는 작업도 필요한데 예산과 조직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기획재정부 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

〈외통위, 독도 · 동해표기 대책 추궁〉(8/17)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독도 도발 및 동해 표기 대책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음. 여야 의원들은 독도 영토주권을 반드시 수호하되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기도에 말려들지 않는 현명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고, 동해 표기에 대해선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법 모색을 촉구했음.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독도문제와 관련해 울릉도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더 많은 국민이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음.
-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여당과 정부에서 독도에 해병대를 배치하자는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도 "독도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 지역으로 굳이 해병대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거들었음.
- 김 장관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측면에서 (군대를) 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분쟁지역화 방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음.
- 동해 표기를 놓고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와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후발주자라 불리한 만큼 공격적이고 요란한 외교로 분쟁지역화 하는 게 유리하다"며 공격적 대응을 주문했음.
- 같은 당 구상찬 의원은 "국제수로기구(IHO)에 우리가 분담금을 1억 원 내는데 일본은 30억 원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수 김장훈씨의 경우 독도 · 동해 수호를 위해 70억-80억 원을 내는데 외교부의 동해 1년 예산은 고작 5천만 원이다.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음.
- 김영우 의원은 동해의 명칭을 '코리아해' 또는 '독도해'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음.
- 미국 정부의 일본해 단독표기 논란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미국 정부가 일본해 단독표기를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외교행위로, 이는 2011년판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미국에 줄 것을 다 주고도 배신을 당했다면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정부, '日 한국가요그룹 입국거부' 주목〉(8/19)

- 일본이 한국 가요그룹 '비스트'의 입국을 거부한 조치를 놓고 외교통상부가 일본의 움직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음. 일본 측은 "단순한 비자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로 방한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을 김포공항에서 돌려보낸 뒤 일어난 한국 유명인에 대한 일본의 첫 입국 거부 사례라는 이유에서임.
- 정부 당국자는 19일 "우리 정부가 일본 의원이 오는 것을 막은 뒤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감정이 안 좋아졌고, 이런 기류가 반영돼 이번 일이 발생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음. 이는 일본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력 행사로 볼 수는 없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 내 기류로 말미암아 보다 엄격하게 비자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인식인 셈임.
- 앞서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자민당 의원은 18일 산케이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처럼 우리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국 정치가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 또 지난 8일에는 일본 도쿄 시내에서 한류(韓流) 반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음. 다만 외교부 내에는 일본의 이번 입국 거부를 '오비이락(烏飛梨落)'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음.
- 8·15 광복절을 맞아 예정됐던 여야 대표의 독도 방문이 기상 문제를 이유로 일단 불발되고 이명박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원론적 수준의 언급을 하면서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임.
-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부터 방위백서 발표까지 잇따라 독도 도발을 해왔던 일본도 특이한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런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 일본 외무성도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을 애초 방침대로 한 달간만 시행하고 최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음.
-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는 "일본 자민당 의원 건과 시점이 겹치면서 생긴 '오비이락'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겠다"고 말했음.
- 이런 상황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이달 말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음. 이번 방문은 개인 일정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일 교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당국자 간 회동도 있을 것으로 관측됨.

라. 미·중 관계

〈로크 美 주중 대사의 '스타벅스 외교' 눈길〉(8/15)

- 게리 로크 신임 주중 미국 대사(61)의 베이징(北京) 입성 후 중국의 네티즌들은 미중관계 등 외교현안보다는 스타벅스 커피를 단연 화제로 삼았음. 중국의 블로거들은 로크 대사가 지난 12일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미국 시애틀공항의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할인쿠폰으로 커피를 사려다 퇴짜를 맞고 쑥스럽게 웃는 장면을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했음.

- 로크 대사는 시애틀 공항의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딸과 함께 할인쿠폰으로 커피를 사려다 종업원에게 거절을 당하자 멋쩍게 웃으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커피를 구매했음. 마침 시애틀 공항에 있던 한 중국인이 이 장면을 포착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올렸음.
- 중국의 네티즌들은 또 12일 가족과 함께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에 도착한 로크 대사가 소박한 차림으로 다른 일반 여행객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짐을 직접 들고 입국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도 웨이보를 통해 널리 유포했음. 그러자 중국의 네티즌들은 '소비지향적이고 과시적인' 중국의 관료들의 행태와 비교하면서 로크 대사에게 찬사의 박수를 보냈음.
- 로크 대사가 14일 베이징의 주중 미 대사관에서 기자들을 초청해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중국 기자들은 로크 대사에게는 외교적인 현안보다는 스타벅스 커피 구입과 공항입국 장면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음.
- 이에 대해 로크 대사는 "나는 나의 일은 스스로 하기를 좋아한다"고 답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했음. 로크 대사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소탈한 이미지로 이미 '스타벅스 외교'를 시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음.
- 로크 대사는 그러나 기자회견과 부임 성명을 통해서 자신이 중국계이지만 미국의 국익을 대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로크 대사는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시애틀로 이민 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화교 출신임. 그는 명문 예일대를 졸업한 뒤 아시아계 첫 주지사(워싱턴 주), 화교 출신 첫 상무부 장관 등을 거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화교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음.

〈美바이든 부통령 방중 개시..쟁점은〉(8/18)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17일 저녁 방중해 닷새간의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방중 의미와 현안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바이든 부통령의 방중은 이미 지난 1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를 통한 미·중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른바 '예정된' 행사이지만, 최근 양국 간 현안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미중 간 논의 추이가 주목됨.
- 우선 눈길을 끄는 대목은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바이든 부통령 방중 기간에 두 차례 회담을 갖고, 베이징(北京)과 청두(成都) 일정에 거의 동행할 것이라는 점임.
- 이 때문에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방중이 시 부주석과의 '교분쌓기'라는 평가도 나옴. 카운터파트로서 연말 방미를 앞둔 시 부주석의 이런 환대 역시 국제사회에 미중 간의 남다른 '우의'를 과시할 필요에서 나온 제스처라는 지적도 있음.
- 미국의 토니 블링큰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5일 바이든의 방중 의미에 대해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하

는 것"이라고 밝힌데서도 미국의 의중이 읽힘.

- 중국 역시 내년 10월 제18차 당대회를 계기로 최고지도자로 등극할 예정인 시 부주석이 바이든 부통령에게 정성을 다함으로써 미중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의지'를 전달하려한다는 분석임.
- 그러나 이런 외견과는 달리 미중 양국 간 '2인자 회담'에서는 현안에 대한 적지 않은 마찰이 빚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임. 이미 중국은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미 국채 안전성과 채무 상환능력을 집중 거론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중단과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압박을 하려는 기색임.
- 중국 매체들도 바이든 부통령의 방중 이틀째인 18일 중국 정부와 '부창부수' 격의 보도를 내놨음. 바이든 부통령의 중국 방문은 경제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미국 국채 하락 문제와 그로 인해 최대채권국인 중국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걱정과 더불어 미국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점이 눈에 띔.
- 국제문제 전문 보도 매체인 환구시보는 1면에 "미국이 서둘러 중국에게 신뢰감을 줘야 한다"는 제목으로 미국을 직접 겨냥했음. 중국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빚쟁이인 미국이 '전주'인 중국에게 돈을 갚을 능력을 먼저 보여주라고 압박하면서 슬그머니 여타 대만에의 무기판매 문제와 남중국해 영토분쟁 불개입 등의 정치 현안에 대한 양보를 유도하는 모양새임.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7일 평론을 통해 미중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려면 중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했다는 현실을 미국이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한데서 바이든 부통령을 맞는 중국의 분위기가 잘 드러남. 구체적으로 지난 6월 말 현재 1조1천655억 달러라는 국채를 손에 쥔 중국의 입장을 잘 헤아려 미국이 행동해달라는 주문인 셈임.
- 중국은 이미 적지 않은 '소득'을 챙긴듯함. 미국은 일단 대만이 오매불망하는 최신형 전투기 F-16 C/D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바이든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선심'으로 해석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대응 역시 간단치 않아 보임. 먼저 미국은 중국의 미 국채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 자신감으로 맞서고 있음. 바이든 부통령은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미국에 있는 중국 돈은 안전하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부터 했음. 미국은 작금의 경제 · 금융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어투임.
- 미국은 그러면서 미중 관계의 단골 메뉴인 위안화 절상 카드와 보호무역 문제, 인권 문제를 적절하게 배합해 역공하는 모양새임. 미 재무부의 라엘 브레이너드 국제담당 차관은 바이든 부통령의 방중에 앞선 15일 취재진에게 위안화 환율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안화 환율 절상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대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중국을 공격했음. 중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는 미국 내부의 불만은 여전함.

– 이런 와중에 미국은 중국에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로 행방이 묘연한 가오즈성(高智晟) 변호사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음. 인권 카드인 셈임. 바이든 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중국의 열악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 중국이 최근 자국 첫 항공모함인 바랴그(Varyag)호를 시험 운항한 가운데 그 기간에 미국이 자국 핵 추진 항모인 조지 워싱턴호를 베트남 북부 수역에 진입시킨 것도 주목할 점임.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지속하면서 바랴그호를 등장시켜 주변 국가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적어도 미국이 그런 상황을 묵과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됨.
– 이와는 달리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미중 양국이 상당수 현안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견'을 모아갈 해법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부통령의 방중에 주목하고 있음. 중국은 은연중에 'G2(주요 2개국)'의 위상을 강조하면서도 상호존중과 상호협력의 바탕에서 새 길을 찾자고 주문하고 있고, 미국 역시 이에 호응하고 있어 공존의 길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바이든 부통령의 방중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원자바오 "美경제 신뢰"..바이든과 회담(8/19)

–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만나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 국면을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제안했음.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9일 오후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바이든 부통령과 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 정상적인 발전 경로로 복귀할 것이라는 점을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음.
– 원 총리는 "미국은 최대 선진국으로서 우수한 과학 기술력과 많은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경제적 바탕이 튼튼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중국은 미국이 책임 있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펴기로 약속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로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음.
– 원 총리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협조와 동주공제(同舟共濟.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이런 각도에서 중미 경제 · 무역 관계의 중요성은 양국 관계를 넘어 전 세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음. 원 총리는 아울러 바이든 부통령에게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 상품의 수출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음.
–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이 자국 내 투자 및 달러화 채무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원 총리에게 약속했음.
– 이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인민대회당에서 바이든 부통령과 회견을 하고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후 주석은 "중미 양국은 세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어깨에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다"

며 "양국이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는 태도로 나라 사정의 차이를 넘어 협력 ·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음.

- 후 주석은 미국과 유럽의 부채 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 국면과 관련해 "현재 세계경제가 중요한 도전을 맞고 있다"며 "동제공제의 정신으로 거시경제 정책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후 주석은 아울러 중국과 미국이 양국 사이의 민감한 문제들을 순조롭게 처리해나가면서 상호 존중하고 상호 '윈-윈'하는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나자고 제안했음. 이에 바이든 부통령은 "강대하고 번영한 중국이 국제 문제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에 긍정적인 일"이라며 "미국은 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양국이 각 부문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음.
- 바이든 부통령은 이어 "미국은 중국이 핵심 이익 문제에 갖는 관심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양국이 민감한 문제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부주석도 바이든 부총리와 함께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미 · 중 비즈니스 대화'에 참석, 미국 경제가 현재의 어려움을 잘 대처해나가면서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음.
- 시 부주석은 "미국 경제는 언제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으며 자가치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왔다"며 "우리는 미국경제가 여러 도전에 대처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음.
- 아울서 시 부주석은 중국 경제는 경착륙을 하지 않고 안정적인 가운데 비교적 빠른 속도의 경제 발전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 정책을 계속 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음.

바이든 쓰촨 방문…시진핑 동행(8/21)

- 베이징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 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쓰촨성 시찰 일정을 시작했음. 바이든 부통령 일행이 탄 전용기는 20일 오후 6시께(한국시각 오후 7시께) 쓰촨성 청두(成都) 공항에 도착했음.
- 청두공항에서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 장예쑤이(張業遂) 주미 중국대사, 웨이훙(魏宏) 쓰촨성 부성장 등 중국 측 인사들이 바이든 부통령을 맞이했음. 바이든 부통령은 22일까지 쓰촨성에 머무르는 동안 서부 대개발의 중심지인 쓰촨성 성도 청두시의 산업시설을 참관하고 2008년 쓰촨 대지진 현장을 찾아 재건 상황을 둘러볼 예정임.
- 바이든 부통령은 또 21일 쓰촨대학을 방문해 대학생들에게 중미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강연을 함. 바이든 부통령의 쓰촨 방문에는 차기 국가주석이 될 것으로 유력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동행함.
- 바이든 부통령과 시 부주석은 쓰촨 방문 기간 비공식 만찬 회동도 계획하고 있음. 바이든 부통령은 22일 5박6일간의 방중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 청두에서 곧바로 다음 순방국인 몽골로 향함.

마. 중·일 관계

○ 중-일 동해 항로 개통(8/19)

- 동해를 거쳐 중국 훈춘(琿春)과 일본 니가타(新潟)를 연결하는 항로가 개통됐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했음. 도에 따르면 이날 니가타 동항(東港)에 동해 정기 항로를 항해한 화물선 테디 베어호(1천552t)가 처음으로 입항했음.
- 입항 직후 니가타시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 등이 참석했음.
- 중일 양국은 지난달 동해 항로 개설에 정식으로 합의했음. 창춘-자루비노(러시아)-니가타를 잇는 동해 항로는 이전에 창춘-중국 다롄(大連)-니가타를 연결하는 데 9일 걸리던 것을 4일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됨. 화물선 운항사는 일본 교토부 마이즈루(舞鶴)시의 이노(飯野)항운임. 10월까지는 월 3편 운항할 예정임.
- 동해 항로에는 2009년 속초-니가타-러시아를 잇는 3개국 화물선이 취항했지만, 화물량과 여객 수가 적어 올해 운항을 중단했음.
- 러시아와 북한에 가로막혀 동해 출구가 없던 중국 훈춘은 북한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이용한 해상 항로 개설에도 공을 들여왔음. 지난 6월에는 훈춘-자루비노-부산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화물 운송 정기 항로가 개통됐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